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승주*, 김혜자*, 김혜진*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모 직업,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공공부문 취업에 있어서 “개인이 통제(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직업, 교육,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민간부분과 달리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구분되는 공공부문은 전통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무관하게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통해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사교육과 맞물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구의 자녀들이 공공부문 입직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선 특정 계층과 집단,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공공부문이 구성되는 것이 견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부모의 모 직업,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父)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가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 취업에 있어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용어 : 공공부문 종사, 대표관료제, 대물림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 종사자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고,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취업)에 있어서 “개인이 통제(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직업(고용부문), 교육 수준,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계층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이러한 맥락에서 사실상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공공부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능력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사회이동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제도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구분되는 공공부문은 전통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무관하게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통해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다. 예를 들어 역대 정부들에서 추진되어 온 고졸채용 활성화 정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채용 등도 모두 구직자에게 주어진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통해 공공부문 진출을 담보하려 노력의 일환이며, 최근에는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 공공기관 채용 시 블라인드(blind) 채용을 의무화 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사교육과 맞물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공공 부문 입직을 위한 준비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구의 자녀들이 공공부문 입직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채용과 관련하여서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비수도권 인재나 소위 비SKY 대학 출신의 공공기관 입직이 증가하는 등¹⁾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는 반면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를 특권 대물림이 심한 사회로 인식²⁾하고 있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입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사회의 공공부문의 종사(혹은 입직)에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과 같은 배경요인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여기에 있다.

II. 선행연구 분석

1. 특권의 대물림에 관련된 선행연구

소위 특권의 대물림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성과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특정 영역(예를 들어 직업, 소득, 교육수준 등)이 자녀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자녀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부모의 높은 소득수준, 높은 직업계층 수준, 높은 교육수준 등을 자녀에게 부여된 하나의 특권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특권)”→“자녀의 교육”→“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적 지위”로 이루어지는 재생산의 구조가 형성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지위(계층구조)의 재생산에 논의도 부모의 직업, 소득, 교육 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부모와 자녀세대의 사회적 지위(계층)의 전이가 발생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초점을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터넷페이지 (<https://noworry.kr/policyarchive/?q=YToyOntzOjEyOj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E7fQ%3D%3D&bmode=view&idx=3853616&t=board>, 인출일: 2020.11.06.)

2) 머니투데이 인터넷페이지(<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713454552026>, 인출일: 2020.11.06.)

둔다.

예를 들어³⁾ 부모의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직업계층이 자녀로 직업계층으로 전이될 확률을 이행행렬을 통해 분석한 연구(최은영·홍장표, 2014; 황덕순; 2000), 부모의 직업계층이 자녀의 직업계층과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피는 연구(김종성·이병훈, 2014)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세대의 교육수준의 세대간 이전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소득계층의 이전에 관련된 분석들 역시 주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수준을 밝히거나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남기곤, 2008; 조우현, 2004)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들은 대체로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계층의 자녀세대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을 매개로한 직업과 소득계층의 이전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공공부문의 종사상 특징

한국사회에서 ‘공무원 열풍’은 이제 보편화된 현상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직업의 안정성과 생애관점에서의 경제적 안정성이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공직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은 편이다.⁴⁾ 이러한 공직에 대한 열망과 함께 공직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 역시 높으며, 정부 역시 공공부문의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 부분과 달리 공공부문의 채용은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만 채용되며, 이를 통해 사회이동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채용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에 비해 공공부문의 종사자의 구성과 종사자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추측컨대 이는 공공부문의 채용과 종사가 민간부문에 비해 공정한 능력중심 채용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사회전반에 깔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학사교육과 맞물려 사회계층이 이동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만 예외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공공부문에 있어서 종사자의 인적 구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 논의로는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들 수 있다.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이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 관료제가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 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의미한다.(강성철 외, 1996:58~68) 다시 말해 대표관료제는 대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 관료조직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회의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과 인재로 관료제를 구성하는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왕대규, 2018) 물론 우리사회의 경우 대표관료제를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대표관료제적 속성이

3) 부모세대의 직업, 교육, 소득수준이 자녀세대로의 전이에 대한 실증 분석 문헌들은 이경희·민인식(2016)을 참고하지 바람
4) 한 민간 구직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의 공무원 시험을 볼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20~30대 대학생 및 직장인 2,201명)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461>, 인출일: 2020.11.06.)

사회에 반영되고 있다. 이는 정부 관료제가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 인종의 사람들로 구성될 경우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선호를 대변할 수 없고 공공부문의 국민과 사회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결국 이러한 대표관료제의 문제의식을 사회계층의 대물림과 고착화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결부해 보면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특정 계층, 인종,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대응성과 책임성, 더 나아가 다양한 이념과 가치, 문화 등이 내재화된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정책의 혁신성이 저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왕태규, 2018, 재인용; 유민봉·박성민, 2017) 따라서 사회이동성이 위기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 종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특히 점차 심화되는 사회이동성 저하 속에서 우리 사회 청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직업,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공공부문 종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앞서 언급한 공공부문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III.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근무 및 입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이하 노동패널)」 자료의 1~22차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탐색하기 위한 장기간의 시계열적 자료로서 1998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시작으로 현재 22차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장기간의 패널조사 자료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본 연구에서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먼저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선 세대간 전이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계열적 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 1차 자료 수집시점에서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단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98년 원표본 가구원 중 가장 연령이 낮은 조사대상도 2019년 조사에서는 37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 노동시장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자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가구(혹은 가구원)의 노동시장 효과를 관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조사 대상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수집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초점은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데 있으므로 분석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제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노동패널 조사의 경우 1998년 원표본과 표본 손실을 대비하여 2009, 2018년에 일부 표본이 추가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 2009년, 2018년 기준 신규표본⁵⁾ 중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

녀(11~19)로 조사된 대상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초점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 즉 공공부문의 종사 여부에 있으므로 노동시장 진출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40세 이하의 자녀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만 19세이상 40세 미만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만 19세(폐널진입 당시)때의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 정보의 추출하여 매칭하였다. 이를 통해 총 분석에 포함된 대상은 1998년 기준으로 2,341명이며, 2009년 기준으로 1,618명, 2019년 기준으로 2,056명에 해당한다.<표 1> 참조)

<표 1> 연도별 자녀들의 고용부분 분포

연도	계	미취업/고용주/무급가구종사자		민간부문 종사자		공공부문	
		(N)	(%)	(N)	(%)	(N)	(%)
1998	2,341	1,534	65.53	731	31.23	76	3.25
1999	1,763	983	55.76	704	39.93	76	4.31
2000	1,531	751	49.05	701	45.79	79	5.16
2001	1,537	703	45.74	756	49.19	78	5.07
2002	1,504	674	44.81	743	49.40	87	5.78
2003	1,572	699	44.47	777	49.43	96	6.11
2004	1,531	704	45.98	717	46.83	110	7.18
2005	1,496	690	46.12	699	46.72	107	7.15
2006	1,438	618	42.98	705	49.03	115	8.00
2007	1,393	621	44.58	659	47.31	113	8.11
2008	1,352	606	44.82	633	46.82	113	8.36
2009	1,618	779	48.15	716	44.25	123	7.60
2010	1,485	671	45.19	698	47.00	116	7.81
2011	1,441	637	44.21	680	47.19	124	8.61
2012	1,427	638	44.71	677	47.44	112	7.85
2013	1,400	629	44.93	664	47.43	107	7.64
2014	1,322	593	44.86	617	46.67	112	8.47
2015	1,367	603	44.11	642	46.96	122	8.92
2016	1,400	616	44.00	662	47.29	122	8.71
2017	1,402	624	44.51	653	46.58	125	8.92
2018	2,274	1,145	50.35	965	42.44	164	7.21
2019	2,056	973	47.32	914	44.46	169	8.22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조사~22차 조사

2. 주요 변수의 측정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는 측정방식과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종사하고 있는 고용부문을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3가지 부류로 구분하였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의 초점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자녀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자녀의 비교에 있기 때문에 고용부문의 구분은 미취업·고용주(자영업)·일용직, 민간부문,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공공부문의 범위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관·정부기관으로 한정하였다.⁵⁾ 부모

5) 따라서 1998년의 경우 원표본 전체에 해당한다.

6) 공공부문을 공무원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정부기관의 명확한 정의가 제기되지 않고, 그 관측대상도 협소하여 본 분석에서는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으로 개념화하여 활용하였다

와 자녀의 교육수준은 무학(0)부터 박사졸업(7)까지 측정하였다. 특히 수료, 재학, 퇴학 등의 경우는 졸업을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한 단계 낮은 학교급의 졸업자로 구분하였다.(예를 들어 중학교 수료는 초등학교 졸업으로 구분)

한편 부모의 가구소득은 자녀의 19세 당시 가구소득의 해당연도의 분위수로 측정하였다. 이는 분석의 시계열적 범위가 길어 소득수준의 원값을 사용할 경우 이를 동일한 소득수준으로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수준을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보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소득수준의 상대적 위치(즉 조사 당시 자녀가 속한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관심이 있다는 측면에서 자녀의 19세 당시 가구소득의 해당연도 소득분위(5분위)를 소득수준의 상대적 위치 값으로 활용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측정

구분	측정	기술통계 (N=34,650)		
		부	모	자녀
고용부문 구분	(1) 미취업·고용주(자영업)·일용직	23,925 (69.05%)	30,082 (86.82%)	16,491 (47.59%)
	(2) 민간부문 종사자: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법인단체/ 미소속/ 시민단체·종교단체 /기타	7,894 (22.78%)	4,222 (12.18%)	15,713 (45.35%)
	(3) 공공부문 종사자: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사합동기업·정부기관	2,831 (8.17%)	346 (1.00%)	2,446 (7.06%)
교육수준	(0) 무학, (1) 초졸 ~ (6) 석사졸업, (7) 박사졸업	2.16 (1.43)	1.38 (1.21)	3.93 (1.04)
가구소득	자녀의 19세 당시(해당연도)의 전체 가구 중 소득분위(1~5분위로 구분)	3.18 (1.36)		
연령	만나이			33.56 (7.86)
성별	남성=1, 여성=0			0.55 (0.49)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초점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부모에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데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stic), 이항로짓분석(Logistic), 경로분석(Path analysis) 등을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다항로짓분석과 이항로짓분석은 자녀의 직업적 특성과 분석대상의 경제방식에 따라 분석을 달리하였는데, 22년간의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대상을 통합하여(Pooled) 분석한 경우에는 민간부문 종사하는 것에 대비하여 미취업·고용주(자영업)·일용직에 종사하는 분석대상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대상에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다항로짓분석으로 추정하였다.⁷⁾ 또한 자녀의 패널진입당시의 직업과 분석기간 중 고용부문이 변화가 있는 경우만을 선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7) 미리 밝혀두지만 패널조사의 이점을 살려 패널다항로짓분석(Panel Multinomial logistic)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분석과 패널다항로짓 분석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패널다항로짓분석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반면 22년의 분석기간 중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 종사한 첫 번째 기록만을 식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패널자료를 활용함에도 데이터의 구조가 만 19세 당시의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분석기간에 동일대상에 대한 중복적인 데이터가 포함된 부분은 고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분석기간 중 첫 민간 혹은 공공부분 종사에서 민간부분 혹은 공공부분으로 고용부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만을 선별하여 추가적인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의 주장에 따라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가 결정된다는 계층의 대물림 현상을 분석모형에 반영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경로분석을 통해서 부모와 모가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공공부분 종사(혹은 입직)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IV. 분석결과

1. 부모의 고용부분과 자녀의 고용부분의 이행행렬

먼저 부모의 고용부분과 자녀의 고용부분에 세대간 전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고용부분의 이행행렬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 통합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가 동일 고용부분에 종사할 확률이 미취업 등은 47.78%, 민간부분은 46.62%, 공공부분은 12.93%로 민간부분에 비해 공공부분으로 이행행렬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 경우에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분간 모와 자녀간의 고용부분 이행행렬은 8.43%로 미취업 등이나 민간에 비해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부모의 고용부분과 자녀의 고용부분 이행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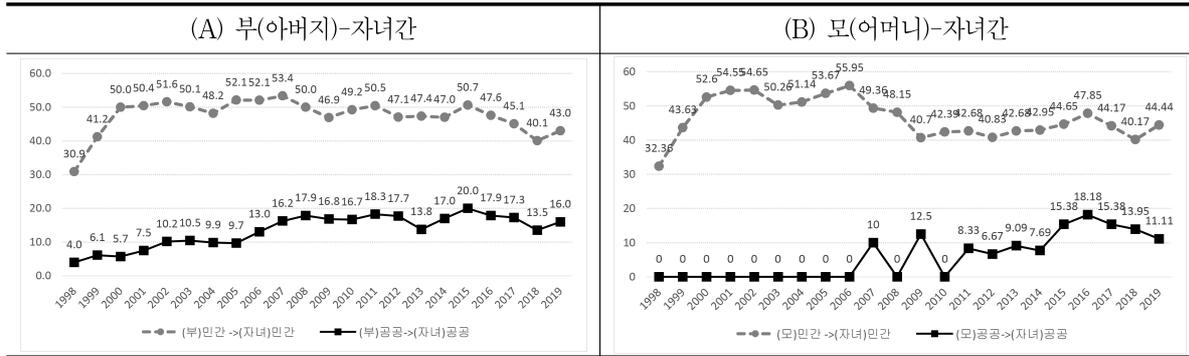
연도	고용부분	종사자 수			이행행렬 (%)		
		미취업 등	민간부분	공공부분	미취업 등	민간	공공
부	미취업 등	11,432	10,919	1,574	47.78	45.64	6.58
	민간부분	3,708	3,680	506	46.97	46.62	6.41
	공공부분	1,351	1,114	366	47.72	39.35	12.93
모	미취업 등	14,366	13,649	2,067	47.59	45.35	7.06
	민간부분	1,938	1,928	356	47.76	45.37	6.87
	공공부분	187	136	23	45.9	45.67	8.43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조사~22차 조사

한편 부모와 자녀의 고용부분의 이행비율의 연도별 변화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앞선 <표 3>의 이행행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와 자녀간의 고용부분 이행비율은 민간부분이 공공부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공공부분에 대한 고용부분 이행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모 모두에서 최근에 올수록 동일 공공

부문에 대한 고용부문 이행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선 <표 1>과 결부해서 판단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자녀들 중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양상이 부모와의 고용부문 이행행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부모와 자녀간의 동일 고용부문 이행 비율(%)



2.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종사 고용부문

다음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가 종사하는 고용부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고용부문별 종사 비율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 자녀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46.57%,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6.65%로 나타났다. 반면 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자녀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36.56%,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8.52%로 기술통계 수준에서는 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모의 교육수준은 그 양태가 상이하였는데, 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낮아진 반면 미취업 등의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다소 상반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고용 부문별 종사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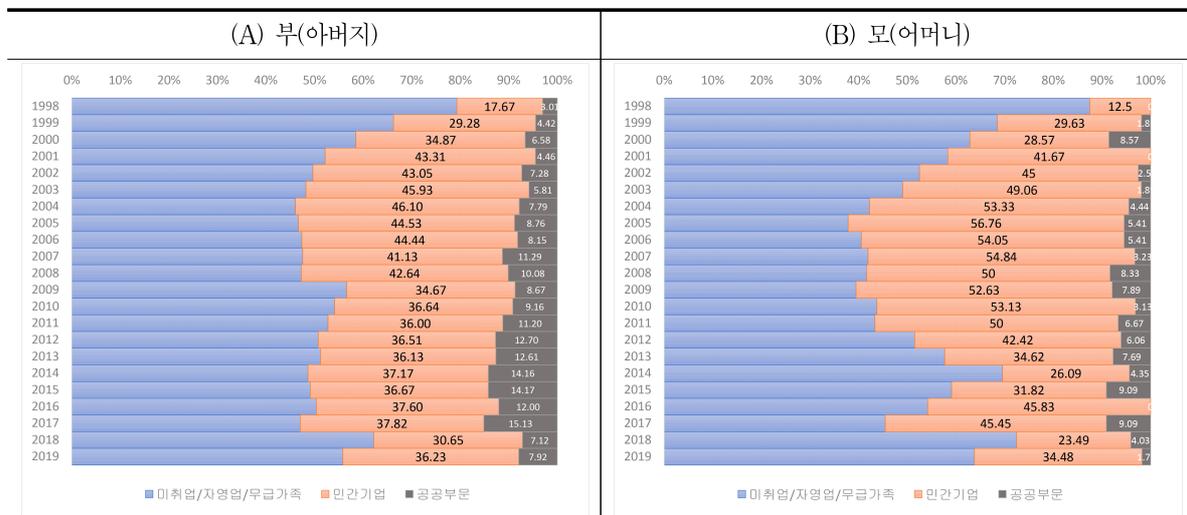
연도	교육수준	종사자 수			종사 비율 (%)		
		미취업 등	민간부문	공공부문	미취업 등	민간	공공
부	중졸이하	9,673	9,629	1,375	46.78	46.57	6.65
	고졸/전문대졸	4,910	4,814	775	46.77	45.85	7.38
	대졸이상	1,908	1,270	296	54.92	36.56	8.52
모	중졸이하	13,115	12,973	1,976	46.73	46.23	7.04
	고졸/전문대졸	2,781	2,355	431	49.96	42.30	7.74
	대졸이상	595	385	39	58.39	37.78	3.83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조사~22차 조사

한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의 고용부문별 종사비율에 연도별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자녀의 고용부문별 종사 비율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의 경우를 자녀의 고용부문별 종사 비율을 살펴보면

신규표본이 진입하는 시점(1998, 2009, 2018)을 중심으로 미취업 등의 종사자 비율이 다소 증가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취업 등의 종사자 비율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미취업 등의 종사자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종사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부문 종사자의 경우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17.67%에서 42.64%로 2.4배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 종사의 경우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3.01%에서 10.08%까지 3.3배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 시점에서의 경우에도 그 양상은 유사하였는데 자녀의 민간부문 종사자의 비율이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34.67%에서 37.82%까지 1.1배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8.67%에서 15.13%까지 1.74배로 증가하고 있어 동일한 부의 교육수준(대졸이상)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공공부문의 종사자 비율이 보다 빨리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의 교육수준(대졸이상)에서는 이러한 양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연도별 부모의 교육수준(대졸이상) 자녀의 고용 부문별 종사 비율 (%)



3.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종사 고용부문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고용부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부모(가구)의 소득 분위별 자녀의 고용부문별 종사자 및 종사자 비율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만 19세 당시의 가구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1분위(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들이 미취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은 53.0%이며,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42.26%,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4.74%로 나타난 반면 소득5분위(상위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들의 미취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은 45.83%,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45.64%,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8.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증가함에 따라 미취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종사자의 비율은 부침없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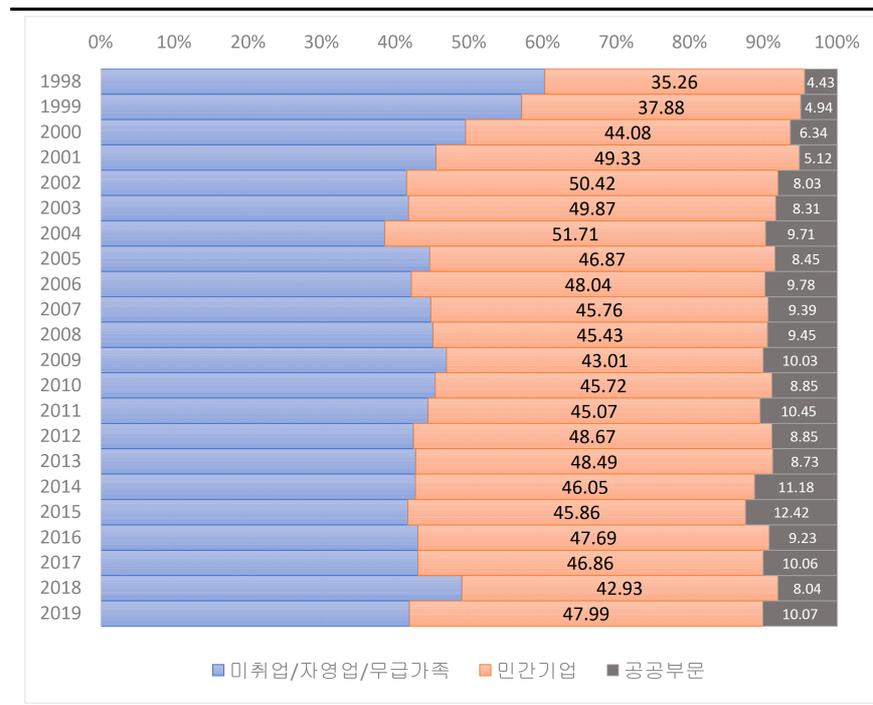
<표 5> 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른 자녀의 고용 부문별 종사 비율 (%)

소득분위	고용부문	종사자 수			종사자 비율 (%)		
		미취업 등	민간부문	공공부문	미취업 등	민간	공공
1		2,171	1,731	194	53.00	42.26	4.74
2		4,151	3,944	530	48.13	45.73	6.14
3		3,273	3,234	512	46.63	46.07	7.29
4		2,907	2,882	482	46.36	45.96	7.69
5		3,854	3,838	717	45.83	45.64	8.53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조사~22차 조사

한편 연도에 따라 가구소득 5분위 자녀의 고용부문별 종사자의 비율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 5분위(상위20%)의 자녀들의 경우 1998년 이후 미취업 등에 대한 종사 비율은 꾸준히 줄다 2002년 이후 부터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부분의 종사 비율 역시 2002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한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부분의 종사 비율도 1998년 4.43%에서 2002, 2003년 10%내외까지 증가한 이후 10~12%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가구의 소득 5분위의 자녀의 고용 부문별 종사 비율 (%)



4. 부모의 직업, 교육, 소득 수준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의 기술통계적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고용부문과 자녀의 고용부문의 이행행렬(일치)에서는 미취업 등과 민간의 이행비율에 비해 공공부문의 이행비율은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공공 부문 종사와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의 이행비율이 시계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종사 고용부문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종사할 비율의 증가 속도가 민간에 종사할 비율의 증가속도보다는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의 종사자 비율을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으나, 시계열적으로는 2002년 이후 미취업 등, 민간, 공공의 종사자 비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고용부분,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다항로짓분석과 로짓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모형(1)과 모형(2)는 22년간 자료 모두를 대상을 통합(N=34,420)하여 분석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이며, 모형(3)과 모형(4)는 분석기간 중 패널의 첫 진입시기와 종사하는 고용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N=5,639)으로 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의 민간부문 종사를 베이스로 했을 때 부(父)가 민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민간부문에 비해 미취업 등에 종사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자녀가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부(父)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민간부문에 비해 미취업에 종사할 확률과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고용부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3)과 모형(4)의 분석결과에서도 부(父)가 공공부문에 종사할 경우 자녀가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이 민간부문에 종사할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母)의 고용부분은 분석모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자녀의 고용부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분석결과 모(母)의 고용부분은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구의 소득수준은 활용된 모형에 따라 그 분석결과가 달랐으나, 자녀의 고용부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모의 교육수준이 미취업에, 가구소득의 높을수록 미취업 등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분석대상을 분석대상기간 동안에 첫 번째로 민간 혹은 공공에 종사한 경우와 이후 고용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을 축소한 후(N=2,512) 자녀의 공공부문의 종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로짓분석결과는 모형(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父)가 공공부문에 종사할 경우 자녀가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모(母)의 종사부분,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소득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및 로짓 분석 결과

Base(민간부문종사)	전체 데이터		자녀의 고용부문의 변화가 있는 경우		첫 민간 및 공공 종사인 경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미취업 등	공공부문	미취업 등	공공부문	로짓 분석(종속=공공)
(부) 민간기업종사	-0.0657** (0.0285)	-0.0564 (0.0576)	-0.0724 (0.0703)	0.00643 (0.130)	0.00695 (0.135)
(부) 공공부문종사	0.0975** (0.0463)	0.743*** (0.0734)	0.130 (0.115)	0.453** (0.186)	0.513*** (0.198)
(모) 민간기업종사	-0.0808** (0.0364)	0.322*** (0.0663)	-0.0815 (0.0869)	0.164 (0.158)	0.216 (0.164)
(모) 공공부문종사	0.155 (0.120)	-0.318 (0.236)	-0.0209 (0.251)	-0.170 (0.432)	-0.0770 (0.462)
(부) 교육수준	0.110*** (0.0112)	-0.0817*** (0.0219)	0.0518* (0.0277)	-0.0477 (0.0497)	-0.0875* (0.0529)
(모) 교육수준	0.0138 (0.0132)	0.00253 (0.0261)	0.0850*** (0.0304)	0.0801 (0.0557)	0.0633 (0.0585)
가구소득(분위)	-0.0663*** (0.00914)	0.0167 (0.0178)	-0.0575** (0.0234)	-0.00127 (0.0413)	0.00129 (0.0436)
연령	0.000834 (0.00153)	0.0251*** (0.00314)	-0.0477*** (0.00575)	0.0621*** (0.00878)	0.0935*** (0.0100)
성별(1=남성)	-0.558*** (0.0235)	-0.483*** (0.0455)	0.133** (0.0597)	-0.275** (0.107)	-0.434*** (0.113)
교육수준	-0.532*** (0.0226)	1.255*** (0.0471)	-0.880*** (0.0651)	0.911*** (0.108)	1.082*** (0.112)
패널원표본(09)	-0.254*** (0.0510)	-0.127 (0.104)	0.0706 (0.112)	-0.195 (0.202)	-0.282 (0.210)
패널원표본(18)	0.333*** (0.0589)	0.190 (0.125)	0.314*** (0.0840)	-0.436*** (0.166)	-0.621*** (0.172)
Constant	1.498*** (0.0739)	-5.573*** (0.163)	3.155*** (0.198)	-5.492*** (0.354)	-6.406*** (0.399)
Observations	34,420		5,639		2,512
log like	-29490		-4787		-1071
N	34420		5639		2512

주1)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주2)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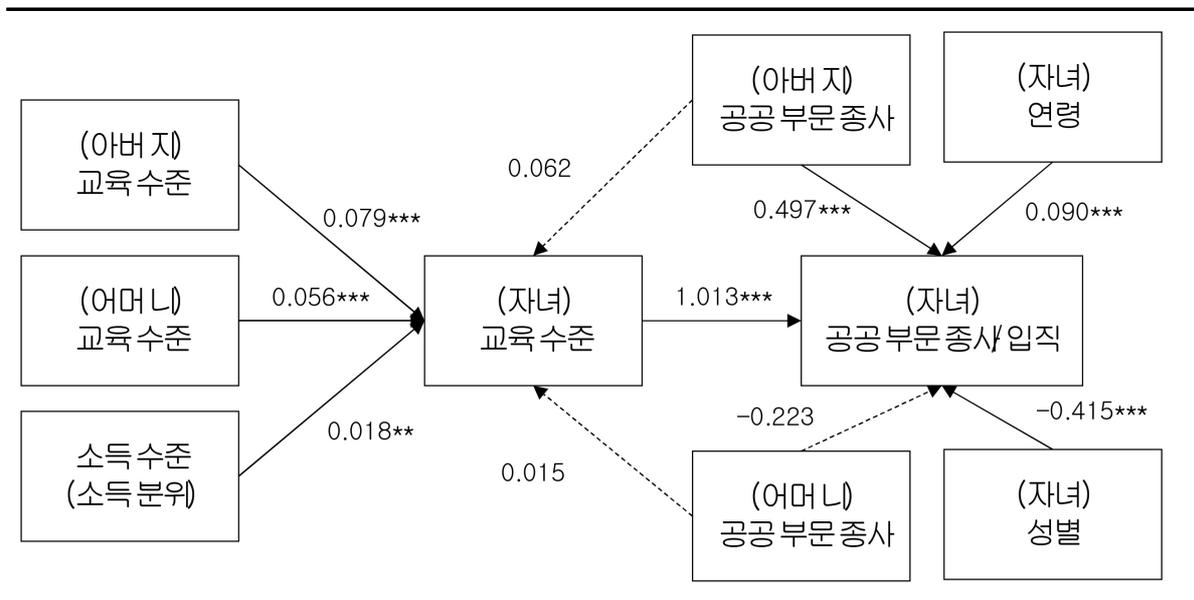
5. 부모의 직업, 교육,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미치는 영향

앞선 다항로짓과 로짓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의 고용부문(공공부문 종사)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주장에 따라 부모의 직업, 교육,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⁸⁾ 분석결과는 <그림 4>에

8) 경로분석의 대상은 위의 모형(6)에 해당하는 대상만을 활용하였다.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는데,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의 교육수준은 공공부문 조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가 공공부문에 종사한다는 점이 자녀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부(父)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점은 자녀의 공공부문 조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모(母)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점은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다항로지분석과 로짓분석 모형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4]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자녀교육을 매개로 공공부문 입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공공부문 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 통계 분석에서는 부모의 고용부문과 자녀의 고용부문이 일치하는 경우는 미취업(등)이나 민간의 일치비율에 비해서 공공부문의 일치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공공부문 종사와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의 이행비율이 시계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종사 고용부문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종사할 비율의 증가 속도가 민간에 종사할 비율의 증가속도 보다는 높았으며, 셋째 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의 종사자 비율을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으나, 시계열적으로는 2002년 이후 미취업 등, 민간, 공공의 종사자 비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모형추정에서는 부(父)가 공공부문

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가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이 민간부문이나 미취업 등에 종사할 확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한 경로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서의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선발되고 이를 통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입직)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결부되는 것을 금기시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부(父)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경우 자녀가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이 높다는 점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중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공공부문에 종사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공공부문 취업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에서 공공부문의 종사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부(父)가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이것이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함에 있어 이것이 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인지 부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나 친숙감, 직업에 대한 이해도 등 네트워크 차원의 정보접근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자녀가 공공부문에 입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인사행정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도 “특권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출발선이 동등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정책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자녀의 공공부문 종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패널다항로짓 분석 결과

Base(민간부문종사)	전체 데이터	
	모형(1)	모형(2)
	미취업 등	공공부문
(부) 민간기업종사	-0.119 (0.111)	-0.107 (0.122)
(부) 공공부문종사	0.361** (0.180)	1.037*** (0.190)
(모) 민간기업종사	-0.166 (0.138)	0.265* (0.150)
(모) 공공부문종사	0.00463 (0.399)	-0.334 (0.449)
(부) 교육수준	0.232*** (0.0434)	0.0402 (0.0475)
(모) 교육수준	0.187*** (0.0477)	0.192*** (0.0531)
가구소득(분위)	-0.155*** (0.0365)	-0.0869** (0.0397)
연령	0.000495 (0.00258)	0.0222*** (0.00376)
성별(1=남성)	-0.474*** (0.0924)	-0.325*** (0.101)
교육수준	-1.870*** (0.0670)	-0.129 (0.0789)
패널원표본(09)	-0.409** (0.176)	-0.214 (0.199)
패널원표본(18)	0.299** (0.135)	0.226 (0.175)
Constant	4.572*** (0.199)	-2.325*** (0.247)
log like	-24180	
N	34,420	

주1)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주2) *** p<0.01, ** p<0.05, * p<0.1

참고문헌

- 강성철·김관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1996).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김종성 · 이병훈(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pp.296~330.
- 남기곤(2008).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 국제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pp.61~92.
- 왕태규(2018). 대표관료제자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채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1), pp.167-193
- 유민봉·박성민(2017).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경희·민인식(2016). 직업 및 소득계층의 세대간 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6-18.
- 조우현(2004), 아버지 학력과 노동시장 불평등, 『노동경제논집』 27(2), 한국노동경제학회, pp.67~89.
- 최은영 · 홍장표(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한국지역사회학회, pp.51~70.
- 한국노동연구원(2020), 한국노동패널 1~22차년 조사자료 유저가이드(1~22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황덕순(2000), 도시취업자의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pp.30~63.